

[2013년 사회적 경제 전망] 협동조합 확산 예상, 우리사회 대안이 되길

2013.01.16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목차

1. 외환위기 이후 2012년까지, 정부 주도의 사회적 경제 육성
2. 2013년, 다양한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확산 기대
3.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필요

새사연은 2006년에 설립된 진보적 민간 연구소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회원들의 후원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불과 삼사년 전만 해도 일부 전문가들 외에는 낯선 단어였다. 이제 제법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한 해의 시작에서 우리경제를 전망하면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되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실체가 하나둘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새로운 실체들에 거는 사람들의 기대가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사회 사회적 경제의 현황을 짚어보고, 2013년 전망되는 변화들은 무엇이며, 이제 막 출발점에 선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 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외환위기 이후 2012년까지, 정부 주도의 사회적 경제 육성

사회적 경제는 상호적 인간을 전제로 하여 협동을 통한 연대를 추구한다. 반면 우리가 이제까지 흔히 접해온 시장경제는 이기적 인간을 전제로 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한다. 여기서 효율성은 수익극대화과 같은 의미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대체로 시장과 국가의 바깥에 존재하며,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¹⁾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다.²⁾ 당시는 자본주의가 막 도입되던 시기로 대규모 도시 노동자들이 양산되었는데, 이들의 생활조건은 임금, 먹거리, 교육, 의료 등 모든 조건에서 매우 열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이나 상호공제조합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위기에 처했고,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정부 대신 사회적 경제가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 이 분야의 대표적 학자인 드푸르니(Defourny)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리로 ① 이윤보다는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할 것, ② 공공사업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 ③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 ④ 자본과 이윤의 배분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우선할 것을 꼽는다.

2) 사실 사회적 경제 자체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존재했다. 원시부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식량 공유의 관습이 대표적이다. 우리사회에도 계, 두레, 품앗이 등의 전통이 존재한다. 시장경제보다 더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사회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등장했다. 무한경쟁, 승자독식,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려는 신자유주의 질서가 확대되면서 실업과 빈곤이 날로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의 맹아라 할 소규모 노동자협동조합이 등장했고, 1996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다섯 곳의 ‘자활지원센터’를 설립했다. 2003년에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시행되면서 드디어 ‘사회적’이라는 말이 정책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취약계층에게 맡겨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실시되었다. 이런 정책 흐름은 이후 2007년 사회적 기업법 제정, 2010년 마을 기업 육성,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우리의 사회적 경제는 정부 중심으로 극심한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도입된 측면이 크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는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에 공헌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경영서비스 지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마을 기업 육성도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선정하여 최장 2년 동안 8천만 원의 사업비와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7년 50개였던 사회적 기업은 2012년 말 774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2539명에서 1만 8689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취약계층 종사자 수는 1403명에서 1만 1443명이다. 마을 기업은 2010년 184개에서 2012년 8월 기준 781개로 증가하였다. 333억 원의 매출액과 5777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고 있다. 단기간에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2018년까지 사회적 기업 3000개, 마을 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준비 정도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보다 1~2년이라는 단기동안 인건비나 사

업비 등 돈을 지원하는 방식에 집중했다. 당장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집중하여 창업 수나 일자리 수 늘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단기 자금 지원은 그것이 끊기는 순간 많은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 전까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탱해오던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나섰다가 뿌리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단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회 혁신을 추구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며, 시장경제의 대안을 창출한다는 사회적 경제의 본래 의미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을 수용하여 최근 발표된 ‘제2차 사회적 기업육성 기본계획(2013~2017)’은 사회적 기업의 가치 확산과 자생력 제고 등을 핵심 분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상품 판매 통로 확대, 자금 및 투자 지원 확대, 공공구매 확대, 지역과 업종별 네트워크 운영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 없이도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의 방향이 옮겨졌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마을 기업의 경우 세부사업은 주로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2012년에 서울시가 마을공동체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기존의 관 주도 마을 기업 사업과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마을주민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체의 역량 부족과 사회적 경제의 가치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우려되는 지점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의 총체적 과제와 함께 논하고자 한다.

2. 2013년, 다양한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확산 기대

2013년 사회적 경제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 중 첫 번째는 협동조합이다. 우선,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이 정부 주도였던 것에 반해 협동조합은 민간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2012년 한 해동안 민간단체나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협동조합 관련 강좌에 대한 호응도 높았고, 관련 출판물도 증가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136건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접수되었다. 서울시에는 36개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신청되었고, 이 중 17개가 이미 설립신고증을 발급받았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지 한 달만의 결과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추세라면 3~5년 안에 800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도 앞으로

다양하고 수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1] 2012년 12월 기준 서울시에 신고된 협동조합 현황

	명 칭	설 립 동의자수 (명)	출자 금액 (천 원)	설립 목적 및 내용
1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22	1,100	대리운전기사들이 자체 콜센터 운영을 통한 수수료 절감, 운전중 사고처리 지원, 상담 및 훈련을 통해 자체 권익신장
2	서울한겨레두레 협동조합	40	3,550	(상조)생활물품과 상포계 조직을 통한 공동체 장례식 추진(장례식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장례식확산, 상포계 소개 및 장례식장 문화 바꾸는 캠페인 활용 및 자료 제작)
3	성북 도시생활폐기물관리 협동조합	5	20,000	생활폐기물자동처리장치의 설치 및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사업
4	한국오픈컨설팅 협동조합	11	1,100	전문경영컨설턴트와 기술자들이 모여 공공기관, 소상공인 농어업컨설팅 등 실시
5	성북의류자원순환 협동조합	5	208,000	재활용의류수거함 설치 유지 관리, 재활용 의류 수거 및 판매 센터 설치 판매
6	한국유아교육 협동조합	12	60,000	유치원 운영 물품 공동 구매, 공동 제작. 프로그램 개발. 인증 사업
7	행복나눔서울 협동조합	6	1,200	웰빙 건강식단 도시락 개발 및 판매, 직영매장 운영, 차후 프랜차이즈로 전개
8	대한미용기기 협동조합	10	10,000	우수미용기기 상품개발, 생산자 소비자조합원 연대와 교류를 통한 판매 및 구입망구축
9	서울한마음뷰티 협동조합	23	23,000	미용기기 공동브랜드화, 온라인 쇼핑몰 구축, 공동 홍보 및 마케팅, 피부관리사 교육, 파견(장기적 계획) 파견
10	지구촌협동조합	94	46,680	이주 근로자 대상 급식소와 인력중개소를 운영하여 이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11	한국아웃소싱 협동조합	5	15,000	중소 아웃소싱업체들이 모여 공동 홍보 마케팅을 통한 공동 수주 사업 수행 비정규직 근로자 교육 및 파견사업 등
12	씨앗들 협동조합	16	7,400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레알텃밭학교' 운영, 도시농업 및 생태 교육, 공동체 텃밭 운영, 분양, 상자 텃밭 보급사업 등 추진
13	전국개인택시복지 협동조합	8	1,000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자체 콜시스템 구축, 온라인 복지 쇼핑몰 운영, 신문발행으로 관련 정보 공유
14	한국주차 협동조합	10	6,000	주차업과 관련된 재화 용역의 공동구매 생산판매 제공 등, 주차정보 실태 조사, 주차장 주요설비인 CCTV 공동 구매, LED조명 대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추진

15	주얼리 협동조합	11	33,000	주얼리 제조, 유통업체들이 협력하여 인터넷쇼핑몰과 SNS를 이용한 에코주얼리 제품 공동 판매, 공동마케팅을 통해 판로 확대, 합리적 가격의 예물제품 제공
16	한지랑 칠보랑 협동조합	13	1,300	전통 한지 및 칠보 수공예 전문가들이 함께 공방을 운영하며 생산 판매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17	북카페마을 협동조합	29	30,100	마을기업인 북카페 운영을 통해 조합원 및 주민들의 소통 공간 제공, 커피 및 전통차 판매를 통한 카페 운영자금 창출 및 주민과의 모임을 통한 소통 확대

* 출처 : 서울시 경제진흥실 사회적 경제과 보도자료, 2012.12.28

이처럼 민간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한 근본적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는 지속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의 경제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이는 현재 서울시에 신고된 협동조합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대리운전, 개인택시, 미용기기업, 재활용, 인력파견업 등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UN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을 벌인 것도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에 비해서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했던 앞의 사업들과 달리 협동조합은 뜻 맞는 이들이 5명만 모이면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앞의 사업들에 비해서 수익추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수익보다는 조합 구성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더욱 주안점을 둘 수 있다. 자본조달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의 출자금이 기본적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수월한 점이 있다.

또한 이같이 협동조합 형태가 가지는 장점은 기존에 존재했던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현재 사회적 기업중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20% 정도였다. 이 외에도 공유경제, 사회적 금융 등 아직 우리가 체계화하지 못한 사회적 경제 분야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회적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의 형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 전반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릇이다.

협동조합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사회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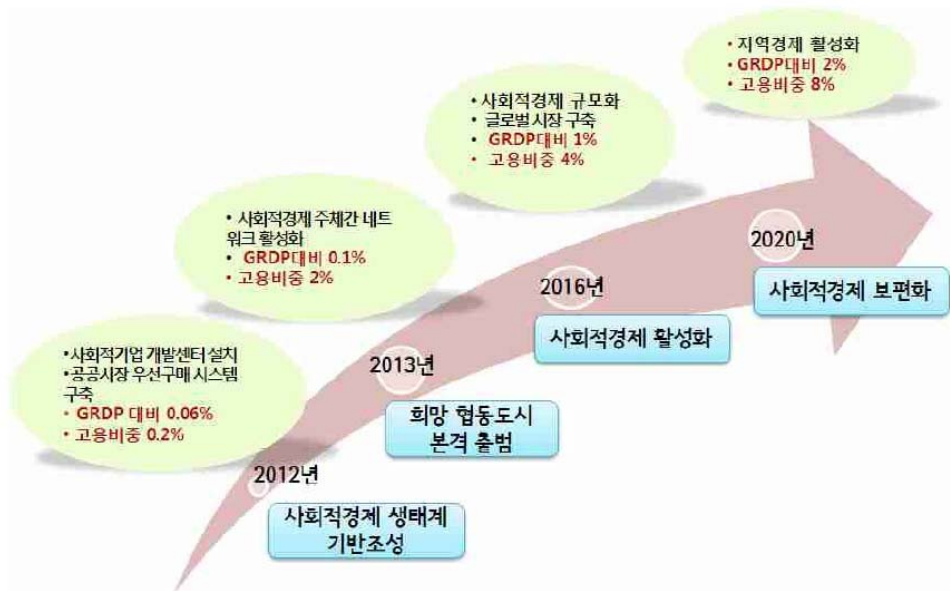
도는 높아진다. 물론 많은 협동조합이 생기는 만큼, 시행착오도 슬하게 겪을 것이고, 그 와중에 망하는 사례도 슬하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또한 기존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협동조합이 확산되면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가는 것은 사회적 경제 전체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 경제민주화나 보편복지 실현에 기여하면서 사회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일반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넘어 공익 추구를 우선으로 한다. 비영리법인이 받는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것과 함께 설립시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조건도 조금 더 까다롭다. 희망제작소의 박아영 연구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을 교집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과 사회적 기업육성정책은 서로의 연결고리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며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목표를 함께 추구하며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주를 확장”시킬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교육, 의료, 보육 등 복지에 있어서 훌륭한 말단 전달체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네에 어린이집을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어린이집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부모들과 교사, 급식 담당자, 지역 주민 등 다양하다.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2013년 사회적 경제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 중 두 번째는 서울시다. 안타깝게도 곧 들어설 새 정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나 전망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박근혜 당선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새 정부의 인수위에도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기울일만한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향후 민간의 흐름이 활발해지면 정부가 그것을 받아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마을 기업을 육성하며,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식으로 각 부처에서의 사업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실현되려면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의 흐름을 묶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현재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를 총괄할 수 있는 주무부처를 명확히 지정하거나 아예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향후 우리사회 사회적 경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큰 틀에서 각 분야를 아우르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을 개별로 인식하는 것보다 사회적 경제라는 큰 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럴 때에만 개별 분야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정책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럴 때에만 사회적 경제가 단순히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1]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종합지원 단계별 추진 목표



* 출처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 서울시 사회적기업과, 2012. 3

정리하자면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협동조합과 박원순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확장시켜 나갈지가 2013년 사회적 경

제의 중요한 변화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예측가능한 변수 외에도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여 우리를 사로잡을지도 모른다.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 등 사회적 금융 분야도 본격적인 출현을 준비하고 있고,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소비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라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앞에 이제 막 마주섰다. 게다가 사회적 경제에 속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금융, 공유경제 등 각 분야들은 그 자체로 미지의 바다이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분야를 발견하게 될 지 알 수 없다.

3.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필요

앞으로 우리사회에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줄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지난 시기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육성 과정에서 그랬듯이 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하게 되고, 정부의 정책 실현 수단에 그치고 만다. 사회적 경제가 자생력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사회운영원리로 인식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개별 분야에 대한 관심에만 머물러서는 각 분야들도 발전하기 힘들다. 과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한계를 드러냈고 사회적 경제가 그 대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신뢰, 협동, 연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사람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면, 사회적 경제를 중요한 사회운영원리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인식의 개선과 확산이 뒷받침 되어야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의 주체들이 정부의 정책에 의지하지 않고 생존하는 방법을 찾으려 나설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 사회혁신 의지가 발현될 수 있다. 또한 개별적인 사회적 경제 실체들이 하나의 지역 및 부문별 네트워크로 뭉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정책 당국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일반 국민들도 사회

적 경제를 우리가 함께 키워나가야 할 소중한 대안으로 지지해야 한다.

둘째, 지역에 밀착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의 요구를 중시하기 때문에 필히 지역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은 지역내 연대가 취약하다. 사회적 기업들만 해도 지역의 주민이나 시민단체보다는 정부와의 관계에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지원은 일시적이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의지해야 할 곳은 자신들의 구성원이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지역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활동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를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발전으로 상정해야 한다.

셋째,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경제가 발전한 해외 사례를 보면 시민사회가 매우 발전해 있어 주도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계획하고 만들어 나간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를 튼튼히 하는 중요한 주체들이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다. 특히 캐나다 퀘벡의 경우에는 80년대부터 노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 진영이 사회적 경제에 기울이는 관심은 일반 대중들보다 낮다.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의 자조와 협동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며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다. 노동운동이 작업장 내에서 노동자간 단결을 통해 노동자의 지위를 높이고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을 찾아가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는 똑같은 역할을 작업장 밖에서 하는 것이다. 시민운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요구를 추구하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는 그것을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간다. 사회적 경제가 튼튼해질수록 노동운동과 시민운동도 튼튼해질 수 있다. 우리사회의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방향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실시해야 할 정책을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아직까지

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개개 부문별 교육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세계사적 의미, 우리사회에서의 의미와 시장경제와 다른 기본원리에 대한 교육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규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며 대학에서는 관련 강좌나 학과의 개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대책으로 협동조합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 교육부터 바뀌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현실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정부 정책에서도 금융지원 방안은 빠지지 않고 제시되었으나 대부분이 대출의 방식이었다. 조금 더 쉽고, 더 싼 가격에 대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들이었다. 대출 외에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제도와 기금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겪는 재정 문제의 큰 요인 중 하나는 공간 임대료이다. 이에 관해 지자체 등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땅을 싼 값에 임대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2~3년 정도의 단기간 임대애 그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고 자립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일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에 문제가 있다.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건축협동조합이나 주거협동조합 등을 육성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거나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연합하여 건물이나 공간을 매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라는 점과 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우려섞인 시선도 많다. 더불어 과연 사회적 경제가 사회구조와 원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어린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시작된 변화의 물결을 되돌리기란 어려운 법이다. 특히 그것이 인간 본성과 역사의 발전에 부합하는 변화라면 더욱 그렇다.

사회적 경제는 협동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과 경제적 평등을 발판으로 정치적 자유를 확산하고자 하는 역사의 발전에 부합한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을지라도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스쳐지나가는 하나의 유행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가 세계경제의 장기침체라는 굴레만을 남기고 사라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영국 총리 대처가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면 외쳤던 "대안은 없다"는 말은 이제 사회적 경제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